

‘아빠 찬스’로 석·박사 학위...조선대 교수들 무더기 유죄

출석 조작 고학점 주고 부정 학위 취득 도운 동료교수 9명 벌금형 교수 부자 징역형...조선대, 아버지 퇴직 조치·아들 학위 취소 검토

동료 교수 아들의 대학원 출석 사실을 조작, 허위로 학점을 주고 부정하게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선대 공과대학 교수들이 전원 유죄 판결을 받았다. 혜택을 받은 아들과 교수인 아버지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특히 선고 과정에서 "(불법 혐의가) 더 있을 것 같은데 증거로 확인되지 않아 판결에 담지 못했다"고 밝혀 항소심에서 검찰의 보완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법원은 또 "조선대가

직장인 학생의 편의를 봐주는 관행이 있었다"고 지적, 향후 학교측의 대대적 학사관리 시스템 개선도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 조선대는 "강화된 대학원 학사 운영 기준을 적용해 학위 수여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며 사과했다. 조선대는 A교수에 대해 퇴직 조치할 예정이며, 아들 B씨의 학위는 대학원위원회에서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광주지법 형사 6단독 윤봉학 판사는 30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선대 공과대학 A 교수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교수의 아들 B씨에게는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B씨의 출석 미달을 눈감아주고 논문을 통과시켜 부정하게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도운 공대 교수 9명에 대한 혐의 사실도 유죄로 판단하고 각각 벌금 300만~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동료 교수 아들 B씨가 조선대 석·박사 통합과정을 수료하는 과정에서 출석을 조작하고 A~A+ 학점을 준 혐의를 받았다. 동료 교수의 아들 한 명을 위해 교수인 아버지를 비롯, 교수 10명이 나서 출석을 인정해주는 특혜 뿐 아니라 고학점을 부여했다는 게 재판부 판

단이다. B씨는 수도권 직장 생활로 7학기 동안 20과목을 수강하면서 대부분 출석하지 않았지만 교수들은 리포트 제출, 세미나 준비, 회사 박람회 참여 등으로 출석을 인정했다. 아버지인 A 교수는 한 학기 내내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출석 대체 방식으로 A+ 학점을 줬다. 윤 판사는 "피고인들 범행으로 조선대 석·박사 통합과정의 학위에 대한 가치와 이를 취득하기 위한 학생들의 노력이 격하됐다"며 "같은 시기 수료한다면 학생들에게 불공정을 초래했고 학적 관리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재판장은 또 "A 교수 부자는 수사 과정에서 정상적인 절차로 학점을 준 것처럼 주장해 범행 후 죄질

도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들 모두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할 점, 조선대가 명확한 학사 관리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던 점, 직장인 학생의 편의를 봐주는 관행이 있었던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윤 판사는 "(불법 혐의가) 더 있을 것 같은데 드러나지 않아 (형량) 이 이상 정하지 못했다"고도 했다. 이 사건의 경우 조선대 학부모형위원회가 해당 교수들을 검찰에 고발했지만 기소유예 등 처분에 그치지 않고 수사 재기, 기소를 이끌어냈다. 조선대는 선고와 관련, 지역민들에게 사과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는 한편, 강화된 대학원 학사 운영 기준을 적용해 학위 수여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전남 지자체들이 만든 공공 앱 15개 폐기대상 꼽혀 혈세 낭비 지적

광주·전남 자치단체들이 수억원을 들여 만든 공공 애플리케이션이 폐기 대상으로 꼽힐 정도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치밀한 수요 조사와 활용 계획 없이 추진하면서 세금 낭비로 이어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익산시 을) 의원이 지난 30일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주시가 2억 900만원을 들여 제작한 '다가치 그린 서비스' 앱은 정부의 성과 측정 결과, 실효성이 적어 폐기 대상 앱으로 꼽혔다. 행안부는 1년 이상 서비스중인 공공앱을 대상으로 누적 다운로드 수, 이용자 수, 사용자 만족도, 업데이트 최신성 등을 고려해 폐기대상을 선정한다. 폐기 대상은 성과 측정 결과 100점 만점 중 60점 미만을 받은 앱으로 그대로 사용하면서 의미 비용을 들이는 것보다 '폐기하는 게 낫다'는 의미다. 광주·전남지역 자치단체들이 만든 공공앱 40개 가운데 15개가 이같은 폐기 대상 명단에 올랐다.

다가치 그린 서비스 앱은 유지비만 2150만원이 들었다. 지난 2016년 제작돼 공개된 이후 5년 간 고작 다운로드 수가 9556건에 그쳤다. 행안부의 성과 측정 결과에서 60점 미만의 저조한 성적표를 받았다. 광주시 공공앱인 '품질관리 119'와 '광주시 알바지킴이 모바일 앱', 'Gwangju2019', 5200만원이 투입된 광산구의 '광산365' 앱도 비슷한 성격으로 폐기 대상에 올랐다. 전남에서는 '전라남도청' (5500만원), '안심전남' (3014만원), '목포스마트이동장넷' (2024만원), '함평 스마트 관광' (1769만원) 등이 저조한 활용 성과 등으로 폐기 판정을 받았다. 이용자인 시민들의 편의성과 활용성을 고민하지 않은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지난해 8월 기준 전국 17개 지자체와 각 시도 교육청이 운영 중인 공공앱 346개 중 128개가 성과측정에서 폐기판정을 받았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5·18진상조사위 업무추진비 사용처 논란

절반 이상 식사·경조사비 등에 써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위) 위원들이 조사활동비로 써야 할 업무추진비 절반 이상을 내부직원들 간의 식사 비용 등으로 쓴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시국을 핑계로 유관 기관 관계자들과의 간담회 등을 축소하면서도 자신들 간 담화나 자체 회의에 업무추진비의 절반이 넘는 돈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도덕적 해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 힘 조명희(비례)의원이 지난 30일 조사위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조사위 송선대 위원장을 비롯, 부위원장·상임위원 등 3명의 간부가 지난해 2월부터 지난 7월까지 사용한 업무추진비는 3100여만원으로, 절반이 넘는 1800여만원(59.8%)을 내부 회의·간담

회, 직원을 경조사·격려 등에 썼다. 송 위원장의 경우 업무추진비 1027만원 중 883만원(86%)을 이런 식으로 지출했고 부위원장은 1271만원 중 670만원(52.7%)을, 상임위원은 822만원 중 314만원(38.3%)을 위원회 내부 직원들끼리 사용했다. 송 위원장은 코로나로 대외 활동이 어려웠던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80%가 넘는 금액을 위원회내 직원들끼리 썼다는 점에서 지나친 것 아니냐는 게 조 의원의 지적이다. 조명희 의원은 "국회 예산 심사와 감사를 피해 왔던 위원회의 방만 운영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면서 "조사위가 정해진 운영 기간을 늘려가고 있는 것도 기간 내 업무 활동 등을 따져 국경감사에서 꼼꼼히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불법 현수막 수거 30일 광주 북구 중흥동의 한 재개발 아파트 건설현장 이면도로에서 북구청 안전총괄과 광고물관리팀 직원들이 교통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도심 환경 조성을 위해 아파트 분양 광고 등 불법 현수막을 수거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수사정보 유출 수사’ 검·경 미묘한 신경전

현직 경찰 직무유기 혐의 구속에 경찰 내부 반발 기류

검찰의 수사정보 유출 수사를 놓고 경찰 내부에서 미묘한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혐의로 인해 경찰이 부실 수사를 했다는 식으로 알려지고 시민단체까지 '수사팀 교체'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반발 분위기도 엿보인다. 경찰이 겉으로만 피의사실공표를 내세우면서 자신들 입맛대로 정보를 유출했다는 이종성,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한 경찰 수사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수사 결과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경찰 내부의 불만은 검찰이 현직 경찰을 직무유기 혐의로 구속한 게 핵심 이유로 꼽힌다. 검찰은 지난 2019년 광역수사대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던 A 경위가 광주 남구 월산1구역 재개발 공사업체 선정 과정에서의 입찰담합 존재와 담

합 주도자를 알고도 내버려둔 채 다른 업체의 대표만 인건한 점에 주목, A 경위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를 수사중이다. 검찰은 A 경위를 직무유기 혐의 외에도 주변 관계자들에게 수사정보를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 등도 적용했다. 하지만 당시 수사팀은 직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게 경찰 내부 분위기다. 당시 담합 의혹을 받은 2개 업체 모두 자신들을 둘러리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라 실제 공사를 낙찰받은 업체 대표에게 답합을 주도한 혐의를 적용,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경찰은 이같은 상황을 '오보 방지'를 내세워 적극 설명하며 반박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다른 재개발지역 불법행위를 수사하던 중 낙찰받은 업체 대표가 아닌, 당시 경찰이

내버려둔 업체의 실질적 운영자가 입찰 담합을 주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입건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A 경위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를 수사중이다. 1~2인 건설사를 둘러리 세우 낙찰받게 하고 수수료 등을 챙겨먹는 담합 주도업체의 수법이 그대로 적용됐는데도 경찰이 관련자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는 것이다. 최근 붕괴사고가 발생한 학동 4구역 재개발 사업 수사에서도 이같은 건설업체들 간 담합 비리가 고스란히 확인된 바 있다. 관련 수사 전문성을 갖춘 A 경위가 모를 리 없다는 것이다. A 경위에 대한 수사는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남 경찰과 공무상비밀누설, 알선수재 등의 혐의 등으로 구속된 브로커 등과도 얽혀 있어 자칫 범조 비리도 확대될 가능성도 점쳐지는 상황이다. 한편, 시민단체들은 A 경위가 지난 2018년 학동 4구역 재개발 관련 의혹제보를 받고도 은폐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경찰은 이에 대해서도 '당시 A 경위는 적극적인 수사를 진행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부동산중개법인 한국토지부동산

강력추천! 투자가치 100% 확신!

다세대빌라

(북구 운암동)

- 대 지 : 364 m²
- 건 물 : 411 m²
- 층 수 : 3층
- 세대수 : 6세대
- 평 형 : 24평형

매매가 : 495,000,000원

상담 010-3733-3933